

# 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4-14호 | 2024년 6월 11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이한주 | idp.theminjoo.kr

##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답은 여성노동자의 성평등과 노동권 보장

- 尹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부쳐 -

류 이 현 연구위원 (정책학 박사)

### 《 요 약 》

#### ■ 정책 패러다임 전환기, 尹정부 ‘저출생대응기획부’ 신설 추진

- 출생률은 복합적 정책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, 현 정부 하 주객전도 현상 발생
  - 文정부에서는 ‘전 생애 삶의 질 개선’으로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
  - 그러나 현 정부의 저고위에서는 ‘여성’과 ‘성평등’을 삭제, 인구에 대한 도구주의적 접근인 ‘출생률 목표치’를 다시 제시, 여성·시민사회·학계·노동계의 우려가 증폭
  - 신설 추진 중인 저출생대응기획부는 개도국 시절 경제개발 방식 답습에 대한 우려

#### ■ 여성노동자의 생애과정에 따른 정책 수요

- 오늘날 저출생 문제는 ‘청년여성노동자’의 성평등 및 노동권 보장과 불가분의 관계
  - 남녀 불문 청년들은 ‘노동중심적 생애’를 설계
  - 임신 및 출산 중심의 인구정책은 청년들의 출산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

성인이행기의 정책수요	출산·양육에 관한 정책수요
고용평등 & 가족선택·구성권 지원	경력단절 해소 & 질 높은 공공돌봄 서비스 확충

#### ■ 정책적 제언

- 인구정책이 아닌, ‘인구전략’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운영
  - 여성노동자의 정책수요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, 그리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전략위원회 또는 인구부 운영
- 文정부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성, ‘전 생애 삶의 질 개선’ 존중·계승해야
  - 고용 전 과정에서의 성평등: 남녀 불문 유자녀 노동자 = 육아 의무자
  - 가족 다양성 포용 및 제도적 지원: 정책지체현상 극복
  - 공적책임 확대와 기업역할 제고: 공보육 확충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, 기업 인센티브 제도

#### ▶ 키워드: 저출생, 여성노동자, 성평등, 가족다양성, 공공돌봄서비스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## 1. 현황

### ○ 초저출생 장기지속은 출생률을 목표로 상정하는 주객전도의 결과

- 제1차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(2006년) 이후 현재까지 **국고 332조원**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생률 0.72 기록, 세계적인 초저출생 국가
  - OECD국가 중 일본(1.26), 이탈리아(1.24), 스페인(1.16)도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으나 0%대는 한국이 유일, 올해 합계출산율은 0.6명대 진입 예측<sup>1)</sup>
- 한 사회의 **출생률**은 복합적 **정책의 결과물**임에도 불구하고, 목표로 상정하는 **주객전도**
  - 임신·출산 장려중심의 도구적 인구정책은 청년세대에게 전통적 사회문화 규범의 강요로 이해되어 오히려 출산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
  - 따라서 **문재인 정부**의 ‘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’에서는 사회·경제적 변화상을 반영하여, 여성의 임신·출산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방향을 ‘**전 생애 삶의 질 개선**’으로 패러다임 전환 →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음: 매우찬성(23%), 찬성(59%), 반대(7%)<sup>2)</sup>
  - 그러나 현 정부에서 제4차 기본계획의 ‘성평등 제고를 위한 목표와 추진과제’를 일괄 삭제하고, ‘출생률 목표치’를 다시 꺼내들어 여성·시민사회·노동계의 우려 증폭
    - ※ 성평등 제고를 위한 목표와 추진과제: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책임 완화 | 성평등한 일터조성 | 포괄적인 성·재생산권 보장 | 젠더폭력 피해구제와 예방
    - ※ 저출생은 삶의 질 개선 여부에 따른 결과이기에,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생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음

### ○ 현 정부에서 경제관료 출신 주형환 저고위 위원장을 중심으로, ‘저출생대응기획부’ 신설 추진

- 尹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‘경제기획원’ 운영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저출생부를 기획
  - ‘인구 = 노동력’으로 이해하고, 투입-산출의 경제기획 원리에 입각하여 저출생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회의적 시각 및 우려 증가

### ○ 오늘날 저출생 문제는 청년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 보장과 불가분의 관계

- 노동중심적 생애를 기획하는 청년여성에게 결혼·출산은 **노동자로서의 생존을 위협**하는 사건<sup>3)</sup>
  - 청년여성은 ‘개인 단위로 생존’할 수 있는 ‘**노동중심적 생애**’를 기획, 청년남성 역시 남녀가 함께 노동하고 함께 양육하는 모델 추구
- 여성노동자가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·IT업의 대도시 집중 현상이 **비수도권의 극심한 2~30대 성비불균형**의 주요 원인<sup>4)</sup>
  - 지방은 여성친화적 노동조건을 갖추지 못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 발달로 남초 현상 지속
  - 전국 160개 시군(특별·광역시 제외) 중 146곳에서 20대 여성 100명당 남성 110명 이상
- 여성노동자 **개인을 단위로** 사회를 재설계할 때 ‘**가족**’이 **회복**되는 역설을 이해해야<sup>5)</sup>
  - 가족중심의 정책지원들이 많을수록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유럽의 경향<sup>6)</sup>
    - ※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 동반 감소
  -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자신의 직업과 커리어를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는 청년여성의 삶과는 괴리되어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

## 2. 여성노동자의 생애과정에 따른 정책수요

### 1) 성인이행기<sup>i</sup> 청년여성노동자의 정책수요: 고용평등과 가족선택·구성권

#### ○ 성평등한 일터 조성

- 20대 전체(20~29) 취업자는 여성이 많지만, 25세 이후에는 남성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고소득<sup>7)</sup>

- 20대 전체 취업자: 남성 178.3만명 < 여성 200.1만명 (2021년 9월 기준)
- 25 ~ 29세 취업자: 남성 129.7만명 > 여성 122.5만명

※ 24세 이하 취업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일 가능성 높음

- 15~29세 성별에 따른 첫 일자리 임금

- ▷ 300만원 이상: 남성 9.6만명 > 여성 4.4만명 (2배 이상 격차)
- ▷ 200~300만원: 남성 51.5만명 > 여성 42.4만명
- ▷ 150~200만원: 남성 65.1만명 < 여성 85만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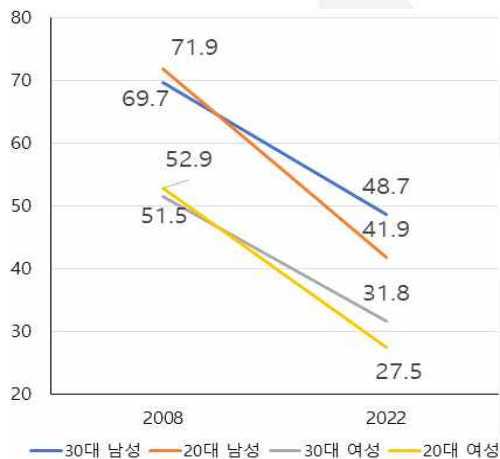
#### ○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 보장

- 결혼의 의미 축소 및 가족 개념의 확장

- ‘결혼해야 한다’에 동의하는 비율 대폭 감소 (2008년 → 2022년)<sup>8)</sup>

: 2022년 기준 미혼남성 36.9% 미혼여성 22.1%만 동의

: 2030남녀의 동의여부 변화는 아래와 같음



- 가족 개념 확장<sup>9)</sup>

- 혼인·혈연으로 연결되어야 가족(64.3%)
- 정서적 유대감에 기초, 주거·생계를 공유하는 관계(69.7%)

- 비혼동거 및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<sup>10)</sup>

- 비혼동거 동의: 청년층 80.9% 긍정(전체인구 65.2%)
- 비혼출산 긍정: 25-29세 여성 80% 긍정(전체인구 39.6%)

※ 전체 가구 중 33.4%에 달하는 1인가구는 이미 친구가족, 동거커플, 비혼공동체 등 다양한 시민결합이 포함되어 있음

※ LG유플러스 | 롯데백화점 | 러쉬코리아 등 기업의 발빠른 대응: 결혼축하금, 유급휴가 등 기혼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혜택을 비혼직원에게까지 확대 ex)미혼자 경조 제도

-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현 정부 하의 여가부는 입장을 바꿔 법 개정 계획을 철회

i Emerging adulthood: 자신이 성인이라고 느끼는 연령(한국: 28세)으로서 선진국에서는 생애주기의 한 단계로 자리 잡음 (유민상, 2022)

## 2) 출산 및 양육 결정 과정에서의 정책수요: 경력지속 및 공공돌봄 서비스

### ○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<sup>11)</sup>

- 출산을 결심하지 못하는 여성만의 이유는 '일·가정 양립의 어려움'이 지목됨

	남	여	
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	36.2%	32.2%	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
사회,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	20.2%	21.4%	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
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	14.2%	17.6%	사회,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

※'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'은 여성이 남성의 약 3배

- 저출생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여성은 보육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지원을 선호함

	남	여	
주거 지원	36.2%	29.6%	보육 지원
보육 지원	23.8%	29.4%	경력단절 예방지원
출산 지원	15.6%	22%	주거 지원

### ○ 질 높은 공공돌봄 서비스 부족

- 여성노동자의 퇴사 고민 시점 1순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
  - 초등돌봄 공백: 부모의 교육과 돌봄 부담이 증폭되는 시기이나 공적 지원 체계 부족
    - ※ 학부모들의 초등학교 수업시간 전후 돌봄서비스 수요: 2019년 30.2% → 2023년 49.5%
  - 경력단절 사유 : 육아 38.2%, 결혼 30.7%, 임신·출산 22.6%, 가족돌봄 4.4% 순<sup>12)</sup>
- 여성노동자가 가장 바라는 정책은 '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(35.6%)'<sup>13)</sup>
  -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로 공급 부족 심화
  - 가사노동자들의 고용개선의 근거가 될 「가사근로자법」이 2022년 제정·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내국인들의 시장진입이 사실상 제한적인 상황

## 3. 정책적 제언

### 1) 전담기구 관련 제언

#### ○ 저출생 관련 패러다임 전환: '출생률 제고' → '삶의 질 제고'

- 전담 부처의 존재 여부보다, 정책의 목표 및 지향에 대한 재고가 중요함
  - 문정부의 제4차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(출생률 제고 → 삶의 질 제고)을 재조명하며, 특히 저출생 원인진단 주목해야

사회·경제적 요인	문화·가치관 요인	인구학적 요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노동시장 격차, 불안정</li> <li>· 경쟁교육</li> <li>· 고용: 일·가정 양립</li> <li>· 주택가격</li> <li>· 어려움 및 성차별 포함</li> <li>· 돌봄공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통적·경직적 가족규범</li> <li>· 정상가족 신화 지속</li> <li>· 청년의 노동자 정체성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출산 연령대 여성인구 감소</li> <li>· 혼인율 하락과 딥크족 증가</li> </ul>

→ 이러한 원인진단은 삶의 만족도,<sup>14)</sup> 삶의 질, 사회적 신뢰, 기회의 평등 등<sup>15)</sup>이 청년의 결혼·출산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최근 연구들과 일맥상통

## ○ 인구정책이 아닌, ‘인구전략’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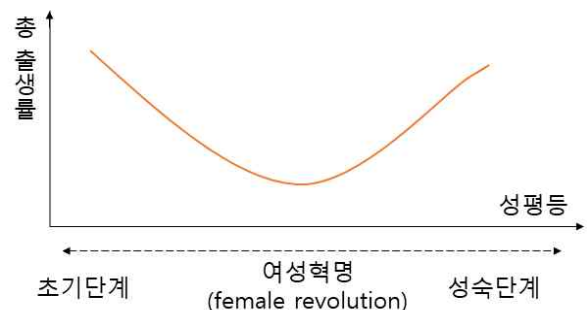
- ‘인구전략(demographic strategy)’은 ‘인구정책(population policy)’ 이상의 의미로서 거시적·장기적인 범국가적 정책 아젠다의 성격<sup>16)</sup>
  - 국가가 인구(population)을 통제 및 관리한다는 발상은 유럽 및 선진국에서는 금기시되고 있음
- **인구정책**은 일정 수준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도달을 목적으로 함
  - ※ 예시: 20세 이상 여성 1명당 평균 출산 자녀 수 1.5명 달성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/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, 복지, 사회 참여 지원 정책/ 특정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
- **인구전략**은 사회가 바뀌면서 변화하는 인구 구성 및 구조를 현 사회에 유리하게끔 만드는 전략
  - ※ 예시: 지속가능한 인구 구조를 위한 장기적인 인구 관련 정책 로드맵/ 인구 변화가 경제·사회·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, 대응 방안 제시/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전략 수립
- 인구전략 추진을 위한 **대통령직속 행정위원회** 또는 **인구부** 신설
  - 전 부처 대상 집행력 및 통솔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는 한계가 있음
    - ※ 현재 윤대통령의 저고위 회의 주재 횟수는 1회에 그쳐(2023.3.28.)
  - 의사결정에 출산의 주체인 청년여성이 참여하도록 실질적 발언권-결정권 주는 제도 혁신
  - 이원적 구조(단기적 기획과 중장기적 기획)로 운영
    - 단기적으로는 정부 임기에 맞춰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
    -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전략 로드맵에 따라 핵심 기초, 원칙, 예산 집행 등이 한 정부의 임기를 초월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
  - ‘팔길이 원칙(Arm’s Length Principle)’<sup>ii</sup> 하의 인구전략 수립·추진
    - 인구전략 하의 구체적 정책추진 시, 인구와 사회 간의 상호관계를 인정하고 ‘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’는 ‘팔길이 원칙’에 입각하여야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것

## 2) 청년여성노동자의 정책 수요에 대한 제언

### ○ 정책목표: 새로운 여성의 역할에 적합한 가족균형 형성

- 평등한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여성의 역할이 정착되면 출생률이 회복한다는 선진국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

< 성역할의 변화와 출생률의 관계<sup>17)</sup> >



ii ‘팔길이 원칙’(Arm’s Length Principle)은 공조직의 문화행정에 보편화된 정책이론으로써, 1946년 경제학자 존 케인스가 영국 예술평의회 의 초대위원장을 맡으며 제시한 원칙. 정부는 정책 집행 시, ‘팔 길이만큼 거리’를 두어, 지원을 하되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.

## ① 고용의 쉼 과정에서의 성평등

### ○ 자녀계획이 있는 남녀 불문 노동자 = 육아 의무자

-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뿐만 아니라 ‘아빠’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제도 개선
  - ‘부’‘모’가 서로에게 양도할 수 없는 휴직기간의 의무화<sup>iii</sup>
    - ※ EU는 양도할 수 없는 두 달을 포함한 4개월의 출산 휴가를 허용하라고 회원국에 권고
  - 육아휴직 기간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분할 사용 횟수 확대
  - 다양한 근무방식 현실화: 시간유연화 및 장소 다양화(재택·원격근무)
- 남녀 노동자 모두의 육아휴직이 전제되면 고용주는 어느 한 성을 선호할 유인이 없음
  - 육아휴직은 단순히 혜택이 아니라 유자녀 시민의 의무이자 책임

※ 스웨덴의 사례: 「‘베이비시터’ 없이도 출산율 높은 스웨덴…비결은 ‘성평등’」<sup>18)</sup>

- “스웨덴 부모들은 내 손으로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도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는다. 2021년 기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80.8%에 달하지만 출산율도 한국(0.78명)의 배를 웃도는 1.66명이다.”
- “스웨덴 아빠들은 의무적으로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쓰며 아이를 돌봐야 한다.”
- “스웨덴은 이제 성별 구분이 의미가 없는, 젠더뉴트럴(gender neutral·성중립) 사회가 됐다…”
- 부모 한 명당 240일 출산 휴가 허용 (195일은 급여의 80%)

- 핀란드의 육아휴직제도 개혁 목표: ① 부모의 양육책임 동등 분배 ② 직장 내 차별 금지 및 평등 강화 ③ 성별임금격차 축소 → 출산율이 증가한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등에서 착안

※ 안티 카이코넨 핀란드 국방부장관은 NATO가입 진행 중인 2023년 1월부터 두 달간 육아휴직을 사용

- 참고: 직접 육아 가능성이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<sup>19)</sup>

- 미국은 돌봄서비스를 저임금 시장에 방임한 국가로서 외국인 저임금노동자의 대거유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생율이 2007년 2.1명에서 2020년 1.6명까지 떨어졌음
- 이주민 여성들의 출산율도 팬데믹과 함께 급감하였음
-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외출금지 및 도시의 봉쇄가 거듭되던 2021년 미국태생 여성들,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이 상승함 → 팬데믹의 기대하지 않은 효과로서 일자리를 보존하며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결과로 분석됨

## ② 가족의 다양성 포용 및 제도적 지원

### ○ 4차 기본 계획의 추진전략 중, ‘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’ 계승

-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차별 없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화
  -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 관점에서 벗어나 청년의 가족구성 선택의 폭을 확장해야 함
    - 국민의료보험 등록 등 가족복지서비스 적용
    - 수술동의서 작성 시 등 법적 배우자로 인정
    - 부성(父姓) 우선주의 폐지, 부모협의로 전환

<sup>iii</sup> 노르웨이(출생율 1.48명): 1993년 아버지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출산 휴가를 최초로 도입  
포르투갈(출생율 1.40명): 성별을 따지지 않고 120일 동안 급여의 100% (추가 30일은 80%)  
덴마크(출생율 1.67명): 아버지들은 생후 2주 동안 휴가, 이후 부모 한 쪽이 32주 추가

- "최소한 출산의 30% 이상이 비혼출산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, 어떤 선진국도 1.6 이상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"<sup>20)</sup>

#### - 비혼출산율 국가 비교(OECD)

국가	비혼출산율 (2020년 기준)	합계출산율 (2021년 기준)
OECD 평균	41.8	1.58
한국	3	0.81
프랑스	62	1.8
덴마크	54	1.72
영국	49	1.53
미국	41	1.66
아이슬란드	69	1.82
일본	2	1.3

※ 비혼출산율이 한국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은, 한국보다 약 300시간 짧은 연간평균 노동시간이 이유가 될 수 있음  
: 한국 1915시간 vs. 일본 1607시간

### ③ 돌봄의 공적책임 확대와 기업 역할 제고 유인

#### ○ 돌봄의 공적책임 강화의 국제적 흐름

- UN은 2023년 총회에서 '국제돌봄의 날'을 지정하여 돌봄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를 강조
- ILO는 '공적으로 제공되는 아이돌봄이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을 때' 가사노동자가 고용되는 현상을 지적함으로써 돌봄책임의 공공성을 시사

※ 돌봄의 공공성이 강한 캐나다 퀘벡 모델의 효과<sup>21)</sup>

- 2016년 캐나다 정책대안센터(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)에 따르면, 1세 이하 영아의 보육비용의 경우 토론토와 밴쿠버가 각 월 \$1,307, \$1,210에 이르는 반면, 퀘벡은 주정부 주도의 보편적 데이케어 정책으로 인해 월 \$164에 그침
- 퀘벡의 보편적 데이케어 정책은 단순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 이상의 사회적 편익을 가져온다고 증명되어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는 퀘벡모델을 전국에 전파하고자 노력 중

#### ○ 공적돌봄 서비스의 질·양 개선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

- 공보육 확충
  - 공보육 확충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, 시간제 보육 확충 등 수요자 중심적 서비스 지향
  - 지역 보육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후 지역 조건에 맞는 운영 방식의 다양화 등 기능 강화
- 돌봄노동 가치인정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
  - 돌봄노동자 관리 및 지원의 체계화를 통해 저임금, 고용불안 해소 및 역량 강화  
→ 프랑스와 같이 심사를 통해 5년 단위 베이비시터 자격증 발급
  - 출퇴근 시간·단시간 돌봄 등 수요가 많은 시간대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

#### ○ 기업에게 출산·양육친화제도가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가 되도록 지원<sup>22)</sup>

- 직원의 출산·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곧 기업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
  - 법인세 감면 혜택 등 세제지원
  - 출산·육아 공백기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대체인력 매칭 비용 보조, 대체인력 고용지원금 상향 및 부서 구성원 인센티브 확대
  - '출산·양육친화 기업지수(가칭)'를 신설, 기업에 등급별 인증을 차등 부여, 인센티브 제공



- 1) 김도형. (2024). 1분기 출산을 0.76명 또 역대최저...“연간 0.6명대 진입 우려”. 동아일보(2024.5.31.).
- 2) 관계부처합동. (2020). 제4차 저출산·고령화기본계획.
- 3) 한국여성정책연구원. (2020). 청년세대 생애전망에서의 남녀차이,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. 이슈페이퍼
- 4) 정진호. (2024). 젊은 여성 지방 떠난다, 이러니 ‘나술’...저출생 뒤엔 무너진 성비. 중앙일보(2024.5.30.).
- 5) 한국여성정책연구원. (2020). 청년세대 생애전망에서의 남녀차이,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. 이슈페이퍼
- 6) Moon, D. S. (2019). Deconstructing the flexiburity effects on health outcomes from gender perspectives: comparative analyses of the impacts of flexicurity on young adult's suicide rates in wealthy countries. Korea University. Ohd dissertation.
- 7) 이재. (2022). 20대 남성 일자리 부족? 통계는 다르다. 매일노동(2023.4.4.).
- 8) 통계청 데이터 활용. 저자 작성.
- 9) 여성가족부. (2020). 2020년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.
- 10) 통계청 데이터 발췌.
- 11) 결혼정보회사듀오. (2024). 출산인식보고서.
- 12) 통계청 데이터 발췌.
- 13) 여성가족부. (2023).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.
- 14) Mencarini, L., et al., (2018). Life satisfaction favors reproduction. The universal positiv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childbearing in contemporary low fertility countries. PloS one, 13(12), e0206202.
- 15) 박정민, 박호준, & 이서경. (2022).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. 사회복지연구, 53(4), 33-54.
- 16) 이상림 외. (2022).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 및 대응체계 연구. 한국보건사회연구원.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22-14-01
- 17) Esping-Andersen, G., & Billari, F. C. (2015). Re-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.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, 41(1), 1-31.
- 18) 계승연. (2023). ‘베이비시터’ 없이도 출산을 높은 스웨덴...비결은 ‘성평등’. 연합뉴스(2023.6.13.).
- 19) Bailey, M. J. Currie, J., & Schwandt, H. (2022). The Covid-19 baby bump: the unexpected increase in US fertility rat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(No. w30569).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.
- 20) 관계부처합동. (2020). 제4차 저출산·고령화기본계획.
- 21) 김양숙. (2021). 캐나다 정부의 아이 돌봄 정책 개편. 한국여성정책연구원. 국제동향.
- 22) 장유진 외. (2024). 기업 내 親출산·양육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. 국제무역통상연구원. Trade Focus. 2024년 1호.